

0.78명 대 1.26명, 한일 출생률 격차 어디서 왔나

태평로

김민철

논설위원



각하지는 않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결혼의 가장 큰 허들로 꼽히는, 그래서 저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는 주거와 교육 문제가 우리보다 나은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지방 명문대가 버티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의 얘기를 듣고 올해 QS 대학평가를 보니 일본 사립 명문인 게이오대·와세다대 앞에 교토대, 오사카대, 도호쿠대, 나고야대, 규슈대, 홋카이도대 등 지방대가 6개나 있었다. 그 바로 뒤에 도쓰쿠바대, 히로시마대, 고베대 등이

일본의 경우 전세 제도가 없어서 우리처럼 결혼하려면 여대의 돈이 필요하지 않고 대입 준비도 우리보다 덜 빡빡해 사교육 문제가 우리만큼 심

지방대였다. 마지막 보루라 여겨지는 지방저점국립대학(지거국)도 휘청이고 있다. 부산대, 경북대, 충남대, 전남대, 전북대 등도 근래 2월이면 신입생을 추가 모집하느라 정신없다. 지방저점국립대의 2021년 자퇴생은 전체 6366명으로 5년 전인 2016년(3930명)보다 1.6배 늘어났다.

인구 전문가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에 초저출생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엄청난 집중”이라며 “엄청난 집중이 물리적인 밀도뿐만 아니라 젊은 층의 경쟁 심리, 불안감까지 높여 출생률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수도권 집중을 풀지 않고는 아무리 주거·교육·보육 문제 등 개별 문제에 집중해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글로벌(Global+Local)대 30 사업을 막 시작했다. 30개 비수도권 대학을 선정해 5년간 1000억원씩 3조원을 지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올해 10개 대학을 선정할 예정인데, 얼마 전 15개 대학을 1차 예비 지정했다. 생각해 보면 이 사업에 대학 구조조정, 지방대 살리기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사업이 성공해야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지방에 평평한 대학 30개가 있으면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심리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글로벌대 30 사업 성패가 저출생 극복에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출생률은 1.26명인데, 우리나라는 0.78명이다. 한일은 물론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 극심한 저출생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도 일본도 아직 턱없이 부족한 출생률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과 격차가 까마득할 정도다. 우리나라는 2001년 출생률이 1.30명을 기록해 일본(1.33명)에 역전당한 후 20여 년째 한 번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언제 출생률 1.0명이 넘었는지 기억이 가물거울 할 정도다.

이런 한국과 일본의 출생률 격차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국에서는 일본인 전문가를 만나 평소 궁금했던 이 문제를 물어보았다. 그는 뜻밖에도 일본은 그나마 지방대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엔 지방마다 명문대가 있어서 굳이 도쿄로 몰려들 이유가 적은 편인데 그것이 한국보다는 아이를 더 많이 낳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준의 맛과 성 [146]

부산 구포국수

부산의 민요 중에 ‘구포다리는 걷는 다리요/영도다리는 드는 다리요/영감다리는 걷는 다리요/새북(새벽)다리는 푸는 다리요’라는 게사가 있다. ‘구포다리 노래’라는 제목의 민요다. ‘영도다리’를 아는 사람은 많지만 ‘구포다리’는 생소하다. 하지만 구포다리는 김해와 부산 사람들에게는 생활과 생계를 잇는 다리이며, 영도다리보다 2년 앞선 1932년에 건설됐다.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다리라며 ‘낙동장교(洛東長橋)’라는 명칭이 붙었다.

구포는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나룻배를 이용해 김해와 부산을 잇고 인근 지역을 오가는 교역 중심지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업이 발달했고, 제분과 제면 공장도 생겨났다. 이렇게 물산과 사람이 구포로 모여들었다.

구포국수가 널리 알려진 것은 6·25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모여든 피란민의 영향이 컸다. 이들은 메밀 대신 배급을 받은 밀가루를 국수물에 넣어 면을 뽑아내 허기와 향수를 달랬다. 1960년대는 쌀이 부족해 보식 장려 운동으로 구포국수가 호황기를 누렸다. 결혼식 답례품으로 국수를 줄 만큼 인기가 있었다. 부산을 넘어 제주도에도 진출했고, 청와대에도 구포국수가 들어가기도 했다. 이 무렵 국수 공장이 30여 곳에 이르렀고, 낙동강 하구는 물론 집 옥상에서도 국수를 건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바다와 강에서 불어오는 소금을 품은 바람은 ‘쫄깃하고 쫄쫄한 구포국수’를 만들고 인근 바다에서 잡은 좋은 멸치로 만든 육수가 더해졌다. 구포장이라는 소비 시장까지 갖추었다.



구포국수가 오래도록 명성을 이어온 중요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제 주변에 공장들이 들어오고 강 하구가 개발되면서 해풍과 강풍에 국수를 건조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 교통 발달로 곡물 창고도 사라졌고, 대기업에서 대량으로 국수를 공급하면서 가내수공업으로 명맥을 이었던 구포국수는 밀려났다. 최근 남은 공장을 중심으로 구포국수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어 새로운 계기를 맞고 있다. 구포시장에서 구포국수를 맛볼 수 있다. 여전히 착한 가격에 한 끼로 손색이 없는 양이다. 전남대 학술연구교수

社 說

北 첫 사용 ‘대한민국’ 용어, 무심코 넘길 일 아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0~11일 대남(對南) 비난 담화에서 이를 연속 ‘남조선’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김여정은 미 공군의 대북 정찰 활동은 북미 간의 문제라며 ‘대한민국 군부’는 개입하지 말라고 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측속’이라고도 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조선, 남조선 괴뢰라는 말을 써왔다. 대남 비난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처음이다. ‘대한민국’에 《》 표시를 써서 자신들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북한 최고 수준의 담화에서 ‘대한민국’을 사용한 것은 그동안 같은 민족끼리의 특수 관계로 간주해 왔던 남북 관계를 일반적인 적대국 관계로 대체하겠다는 뜻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1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 사망 20주기 금강산 추도식을 거부할 때도 대남기구인 조평통이 아니라 외무성을 내세웠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남북은 1991년 채택한 기본합의서에서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로 규정했었다. 북한이 이런 특수 관계를 부정하고 나섰다는 것은 현재의 분단 상태를 영구화하고 어떤

한 통일 논의도 거부한다는 의미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김씨 왕조의 영속화 뜻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후, 남북 대화를 거부하며 대남 공세를 강화해 왔다. 북한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남측과 더 이상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며 개성공단 내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민족’에 기반한 대남 노선 수정을 공식화했다. 2021년 제8차 당 대회 이후엔 대남 담당 비서 직책이 사라졌다.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8월 “절대로 상대 해주지 않을 것”이라며 “제발 좀 서로 의식하지 말며 살았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원”이라고 했다.

북한의 ‘대한민국’ 표현은 ‘같은 민족’으로서 최소한의 배려도 하지 않겠다는 위협에 담고 있다. ‘실마 같은 민족에게 핵을 쏘겠느냐’는 식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앞으로 핵·미사일 문제 등에서 남북 차원의 논의를 전면 거부하고 새로운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천안함 폭침처럼 증거를 찾지 어려운 도발을 하거나 새로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 북의 의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



미래산업·탄소중립 유일 방안 새 원전 건설, 고삐 죄야

산업부가 10일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폐기 방침을 천명해 왔지만, 그동안 나온 것은 문재인 정부가 취소시킨 신한울 3·4호기의 건설 재추진과 설계수명 넘긴 원전의 계속 운전 방침 정도였다. 신규 원전 건설 방침은 처음 나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2015년 작성한 7차 전력계획에선 2029년까지 모두 13기의 원전을 짓는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완공된 것은 신월성 2호기, 신고리 3·4호기, 신한울 1호기 등 4기에 불과하다. 문 정부는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원전(경북 영덕)·대진원전(강원 삼척)의 6기는 아예 포기했다. 윤 정부는 탈원전 폐기를 밝혔지만 부지가 확보된 신한울 3·4호기만 재추진하고 있을 뿐이다. 벌써 윤석열 정부 임기 중 1년 2개월이 지났다.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너무 늦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산업부 에너지차관을 경질했다. 대통령의 원전 재추진이 충실히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문책으로 해석됐다. 그 뒤 산업부 과장들이 태양광 업체의 로비를 받고 안면도 태양광 단지를 불법 허가해 주고 그 업체의 대표, 관련 업체의

임원으로 취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산업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순응한 것을 넘어 그걸 자신들 이의 행거기에 활용했다. 신규 원전 건설이 부진한 것도 담당 부처의 그런 분위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전기차 보급, 데이터센터 증설, AI 등 4차 산업 본격화에 대비하려면 전력 공급 능력이 대대적으로 확충돼야 한다. 우리의 1990년 전력 사용량은 118테라와트어워(TWh)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그 4.7배인 555TWh를 썼다. 탄소중립 목표연도인 2050년 전력 수요는 무려 1250TWh라는 예상이 있다. 태양광·풍력도 활용해야 하지만 우리 자연 조건을 감안할 때 원자력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한 현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 세계가 실감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계획했던 5차 전력수급 계획은 2024년의 전력 공급 중 원전 비중을 48.5%로 잡고 있었다. 지난해 원전 비중은 27%에 불과했다. 탈원전으로 허송한 지난 정부 5년이 특히 뼈아픈 공백이었다. 신규 원전 건설에 지금 부터라도 고삐를 죄어야 한다.

세계 유례없는 집단 시위 일상화 국가, 법원 판단도 달라져야

민주노총은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이 이곳에서 오후 5~11시 집회를 갖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은 “퇴근길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며 오후 5~8시 사이 집회는 금지를 통보했다. 그러나 법원은 민주노총이 낸 집행금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경찰이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법원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이다.

세계에서 우리처럼 집단 시위가 일상화된 나라가 없다. 집회·시위가 신고제여서 극히 일부 지역만 빼고 신고만 하면 경찰이 제어할 방법도 없다. 도심 광장은 물론 대로로 막고 집회·시위하는 것이 일상이고 이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다. 연세대에서 민주총 청소·경비원들이 너 달간 스피커 불륨을 높이고 교내 집회를 벌이려 한 학생이 여러 법적 조치를 취했지만 모두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이 나왔다.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어 법을 개정할 수도 없다. 결국 집회 시위의 자유와 시민 일상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유일한 곳이 법원이다. 경찰과 법원의 판단은 집회·시위 제한을 규정한 집회시위법 5~12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갈리고 있다. 그런데 법원은 시민의 일상보다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우선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아무리 기본권이라 해도 다른 사람의 일상을 현저하게 해치는 수준까지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을 법원도 잘 알 것이다. 특히 다양한 미디어 등 얼마든지 의사 표현할 방법이 많은데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려는 시위가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나.

시위와 집회의 목적은 자신들 의견을 전달하는 데 있다. 그것이 정도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이들의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수준이면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이 맞는다.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으면 한다.

후쿠시마·양평 막무가내 괴담 총공세... 국힘 지도부 어딴나?

뉴데일리 newdaily.co.kr

김기현(대표) 이철규(사무총장) 유상범·강민국(수석대변인) 모두 자리 비워 "자유 국민과 전투적 정치인, 투쟁 전면에 나서 '홍위병 난동' 제압하자"

정권 타도 깃발 든 민주당과 촛불 부대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리투아니아로 출국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였다.

이 권력의 진공상태에서 이재명과 그 일행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 김건희 로드 게이트”라고 못 박았다.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요구했다.

‘촛불 행동’ 등 단골 부대들도 ▲ 민주당 내 ‘윤석열 탄핵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시민사회와 공동 운영 ▲ 김건희 특검 도입 ▲ 이태원 참사 독립조사기관 설립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과 운동 단체들이 윤석열 정권 타도를 위한 총공세를 편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존속이나, 타도가 막바지에 섰다.

한기한 국힘 지도부, 뭐 하고 있나?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나? 당 대표, 사무총장, 수석대변인들이 모조리 외유를 떠났다. “왕성방은 외국 여행할 테니, 싸움은 곰들이 하라”는 소린가? 그렇다면, 누가 나서 자유민주 보루를 지킬 것인가? 싸움의 고통은 도맡아 감내하면서 싸움의 과실은 늘 빼앗기는 애국 시민이 또 나설 수밖에 없다.

싸움은 이렇게 하는 것

어떻게 싸울 것인가? 두 개의 모델이 있다.

국민적 차원에서,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 범주의 시민·고교 동창들·군번 소지자들·아저씨·아주머니들·생활인들·자유 개인들·신앙인들의 사심 없는

투쟁의 전례가 그것이다.

정치인 차원에서, 국토부 장관 원희룡의 전광석화 같은 반격이 또 하나의 모델일 수 있다.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자유 국민과 반(反) 괴파 정치인들이 그렇게 싸우지 않고선, 저 흉포한 홍위병 난동을 이겨낼 수 없다. 언론도 기회주의로 가버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특히.

극좌 운동권, 닥치고 질러 흔들겠다는데

극좌 운동권의 속셈은 분명하다. 저들은 자신들이 이룩한 극좌 혁명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되돌리는 사태는, 죽어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 팽우병 사기(詐欺)든 ▲ 탄핵 사기든 ▲ 후쿠시마 괴담이든 ▲ 김건희 로드 게이트든, 그 어떤 거짓도 불사(不辭)하겠다는 것이다. 나중엔 어찌 되진, 우선 질러 흔들어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평 고속도로는 민주당 쪽 고위층 땅값만 올려주지 않았는지?

자유인들은 언제까지 이 폄소 시리즈에 휘둘리거나

할 것인가? 더는 안 된다. 끝장을 내야 한다.

일어나자, 자유인들. 자유변영-공정의 깃발 아래!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위원 / 전 조선일보 주필



[방류수 특집 ①] '과학'이나 '미신'이나... 더불어민주당은 '미신'을 믿고 있다



[방류수 특집 ②] '한국운동권, '원각'에 빠졌다... 체제 타도에 불리하면 과학도 '반동' 취급



이 기사는 인터넷신문 뉴데일리(newdaily.co.kr) 칼럼으로 7월 11일 게재 되었습니다.

